

『재난·재해 대응』, 현장 중심! 국민 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1.23.



행정안전부

보고 순서

I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II

중점 추진과제

선진국 두 배 수준의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

Ⅰ **한국 12.8% / OECD 평균 6.4%** (전체 사망자 대비 안전사고 사망자 수)

* '16년 안전사고 사망자 : 28,218명('15년 28,784명) ※ 어린이 사망자('16년) : 196명

반복적인 대형재난 발생

Ⅰ **경주('16.9.), 포항('17.11.)지진 등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 증가**

* (규모 5.0이상 지진) '78년 지진관측 이래 발생한 총 10회 중 최근 2년간 4회 집중 발생

Ⅰ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 제천 화재('17.12.)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 빈발**

안전취약계층 증가, 국민 요구 증대

Ⅰ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17년) 14%(고령사회) → ('26년) 20%(초고령사회 진입)**

Ⅰ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1순위 기본권 : 안전권(31.3%) ('17.7월, 국회의장실 의뢰조사)**

영흥도 낚싯배 사고 ('17.12.)

- ✓ 기관 간 신고이관 지연
- ✓ 초기 출동태세 미흡
- ✓ 출동장비 부족

제천 화재 ('17.12.)

- ✓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 ✓ 현장지휘관 역량 부족
- ✓ 건물구조정보 미활용

포항 지진 ('17.11.)

- ✓ 초기 이재민 관리 미흡
- ✓ 안전점검 혼선
- ✓ 지진대피요령 미숙지

**I 현장 재난대응체계 및 역량 미흡**

- › 현장-상황실-기관 간 상황 공유 및 초기대응 미흡
- › 현장지휘관 및 재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훈련 부족

* 지자체 담당공무원 재직기간 : 평균 1년 5개월('17.4.)

I 일선 현장의 재난안전 인프라 부족

- › (인력) 전국 소방인력 법정기준 대비 37% 부족, 도·농 간 격차 심각
- › (장비)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용 고가사다리차 2대 불과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2,316동, '17.5월 말 기준)

I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저조

- › 교통사고의 56%, 화재의 53%가 안전수칙 위반이 원인('15년)
- › 장애요인 : 안전의식 부재(29%), 안전행동 참여 부족(26%) 등

('15. 행정연구원)

2018년의 의미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행정안전부 통합 2년차
국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추진

중점 추진과제

1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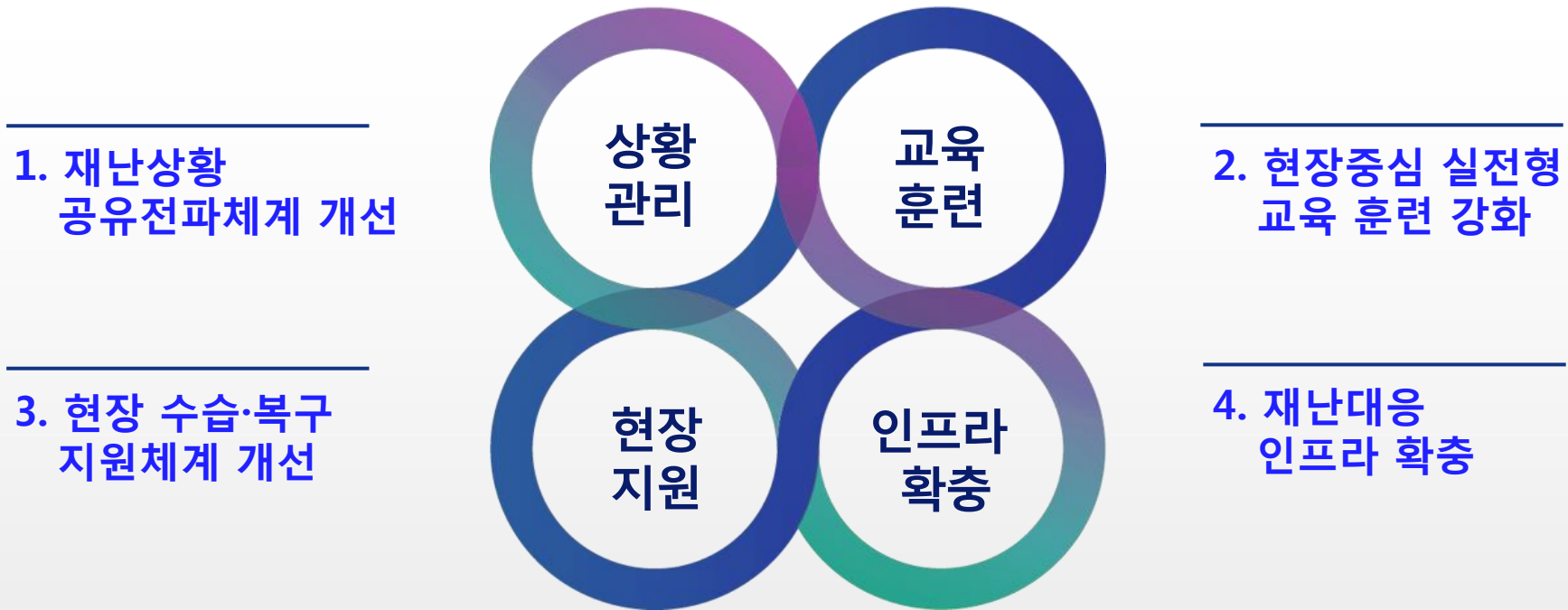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을 확실히 뿌리뽑겠습니다.

재난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4대 개선과제 도출



“국가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 필요”
(대통령 지시사항, '17. 7. 27.)

문제해결형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상황정보 공유 확대

› (정보공유) 기관별 **상황정보시스템 간 공유 인프라 확충**

* 기관 간 연계(35개 기관 52종), 중앙-지자체(현재 6개 → '19년 17개 시도)

› (소통) 기관 간 **영상회의시스템 연계 확대**, 재난 시 소통과 협력 강화

* 현재 20개(소방, 해경, 지자체 등) → '18년 22개(해수부, 산림청 확대) → '22년 35개 완료

› (훈련) 상황전파 훈련(월1회) 및 평가를 통한 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 제고



대국민 상황전파 사각지대 해소

› (긴급재난문자) **지자체 신속 전파체계** 개선 및 행동요령 안내

* 지자체 표준문안 정비, 발송 훈련 실시, 지진 시 **재난문자 강제 수신** 조치 등

› (예·경보시설) 시설 보수보강 및 훈련 등 예·경보 역량 제고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총 14,507개소 **전수점검**, 3,061개소 **신규 구축**



“긴급신고전화(119, 112)” 운영체계 개선으로 초기대응 역량 제고

› (시스템) 긴급신고통합체계 개선

- 기관 이관 시 선택단계 축소 (4→2단계)
- 긴급신고내용 소방·해경·경찰 **동시 전송, 전달시간 단축 (8초→1초)**

※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 (7분→10초)

› (역량) 신고전화 운영자 역량 강화

- (행안부) 운영자 교육자료 제공, 불시훈련 등
- (현장대응기관) 신고접수 시 일반전화 사용금지 등 신규운영자 교육 실시 의무화

“재난통신망” 구축으로 현장대응역량 극대화

› 8대 분야 333개 기관 단일망 사용

- 현장과 상황실 간 **실시간 공유**, 소방·해경 등 **통합적 대응**

› '20년까지 재난통신망 전국 구축

- 중부권 5개 ('18년) → 남부권 9개 ('19년) → 수도권 3개 시도 ('20년)

※ 총사업비 1조 7,025억원 (KDI 검토)

[재난안전통신망 구성도]



현장 실전 중심



(지자체) 재난업무 책임자·담당자 교육 강화

- ▶ 자치단체장 재난관리 교육 추진
 - 부단체장(재난시 통합지원본부장) 교육 의무화
- ▶ 담당자 전문교육 관리 강화(연 7h)
- ▶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지정 확대(42개 → 50여개)

(소방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지원

- ▶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 교육·평가제 도입
 - 역량평가 교육과정, 평가기법
- ▶ 구조기관 통합지휘 역량 훈련 강화
 - 소방 등 훈련 시 지자체·관계기관 참여

(국민) 안전의식·대피요령 체화

- ▶ 국민참여형 안전한국훈련 확대
 - 어린이 안전훈련: 17(17) → 30여개 학교(18)
 - 국민체험단: 1,200명(17) → 2,000명(18)
-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안전교육
 -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사례집』 학교·기관 배포·활용

법정부 협업을 통한 재난현장 지원체계 강화

- ›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 체계적 운영 및 확대발전
- ›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 운영



자원봉사 기능 체계화로 효율적인 재난현장 지원

- ›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봉사자 모집·배치 등 총괄
 - 자원봉사센터(중심)+대한적십자사·봉사단체+공무원
- › **자원봉사 매뉴얼** 제정 (재난유형·규모에 따른 단체별 역할, 행동요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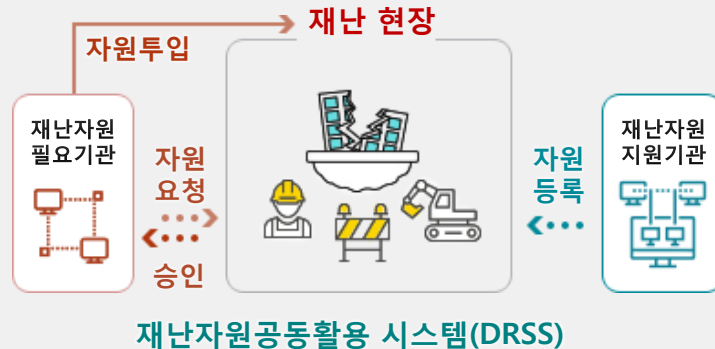
피해자 중심의 구호·복구체계 개선

- › 이재민 구호소 기준, 구호자 배려대책 등 세심한 **운영매뉴얼** 마련
- ›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후속관리체계 개선



재난 시 현장투입자원 동원 및 공동활용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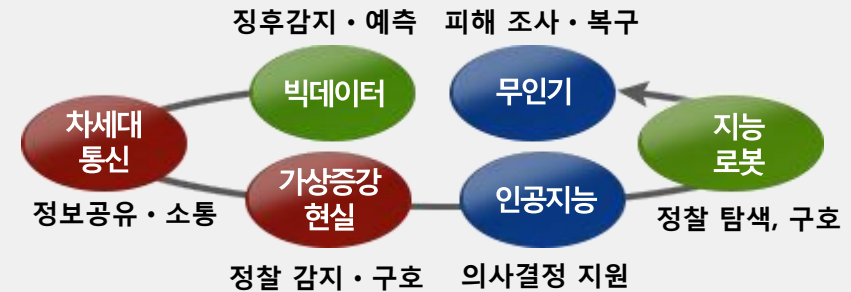
- 활용도 높은 **중점자원** 중심의 분류체계 개편
- GIS 기반** 시스템 구축, 재난현장 주변자원 검색 및 공동활용 지원



대응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

- 지역특성·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매뉴얼** 작성
- 전자(mobile)매뉴얼** 보급, 현장활용 편의성 제고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



ICT 기반의 AR·VR 실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증강현실프로그램(AR : Augmented Reality)



지능정보기반 재난안전 활용기술 개발

*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재난원인 조사 분석 (시범운영 중),
딥러닝 기반 검출 알고리즘, 지능형 수위감지 시스템 등

중점 추진과제

1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을 확실히 뿌리뽑겠습니다.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차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차로 화재현장 접근 곤란

피난구 관리 부실

피난시설 물건 적치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초래

어린이 통학로 안전규정 위반

통학로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위험유발 운전

음주·과적·과속·졸음운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및 불감 의식

(과제 2)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공사현장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모, 안전띠 등 미착용 등으로 작업 중 인명사고 발생

작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

용접작업 시 인화물질 방치로 화재 시 피해 급속 확산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15.3)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시설물 기준 및 천막 방염성능 미흡으로 인명피해 우려

안전수칙 무시 레저활동

기상악화시, 위험장소 등에서의 레저활동으로 사고 다발

-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4가지 측면의 종합적 근절대책 추진



취약 분야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 중대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마련

*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 이동 조치 및 소방관 면책권 부여, 비상구 불법 폐쇄 시 영업정지

› 화재 등 **취약 요소별**(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등) 안전관리 기준 개선·보완

* 화재개선지구 선정, 화재성능평가 실시 및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 도입 (행안부 → 각 부처·지자체)

› 안전기준 미비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개선 권고

* 예시) 야영장 화재 관련 방염천막, 경보기 설치 기준 부재 → 문체부에 안전기준 마련 요구

›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국무회의 등)

➡ **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총괄·조정 역할 수행** (안전정책조정회의, 안전기준심의회)

취약 분야 필수 안전 시설물 투자 확대

› 어린이 교통안전 중점 확보 및 소방활동 보장 주차 금지 시설물 확충

* 보도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81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1,300여개소) 등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활용, 중점분야 집중투자

*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재해위험지역 정비, 철도 안전시설 개선, 유해작업환경 개선 등

사전예방·현장점검 지원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 자동 화재감지 진압시스템, 중장비 자동제어 시스템(위험인지 시 작동정지) 개발·보급

› 안전기술의 산업화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토대 마련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토석류 유출 저감시설 기술 등 민간 이전('18년 31억)

⇒ 총 3.7조 투입,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 확보

›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강화 및 「제3차('18~'22)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추진

“안전보안관(가칭)” 양성, 국민 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

- › 국민·시민단체(안전교육 이수자), 안전모니터봉사단(77,150명), 현장관찰단(464명) 등
- ›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전신문고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지원
 - * 외국어 신고기능 탑재,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등 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곳곳에 산재한 안전 위협요인 발굴 및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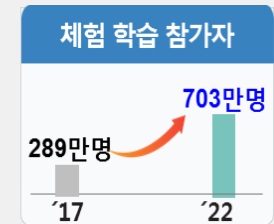
- › (각 부처) **안전사고 빈발** 분야,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우려** 분야 중점점검
 - * (기간) 2.5.~3.30., (대상) 약 29만개소(위험시설 3만개소, 일반시설 26만개소)
- › (행안부) 부처별 안전관리체계 분석, 제도의 현장 적합성 등 **메타점검** 체계 마련
 - *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 + 법·제도 개선사항 및 불합리한 관행 발굴

⇒ 생활 곳곳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 확보 및 지속관리 체계 마련

- › 범부처·지자체(특사경 등) 협업체계 구축, 안전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불시 단속 및 처벌 강화

체험 중심형 안전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 안전체험관 지속 확충 및 체험학습 참가자 확대(매년 20%)
- ›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맞춤형 국민 행동요령 보급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전면 확대

- › 現 학생·안전담당자 중심 교육 → 전 국민 대상으로 안전교육 확대

* (아동기) 생존수영, 보행안전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피해 및 예방법
(노년기) 노인 고독사 방지 교육 등



➡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 운동” 전개

- › 국민, 민간기업·단체,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민 공감형 근절과제 발굴, 추진

중앙-지방-국민이 힘을 합쳐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 안심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